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방안 모색

- 김병환 제1차관,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 전문가 간담회(제3차 미래전략 토론회(포럼)) 개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9.12일(화) 15:45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 관련 간담회('23년 제3차 미래전략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보, 미래전략국장,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 국토부 국토정책관,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장
(발제자)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
(토론자) 박용진 (주)오토닉스 대표, 양경준 (주)크립톤 대표, 배웅규 중앙대 교수, 장철성 강원대 산학협력단장, 한석호 제비마을 부흥권역 추진위원장

오늘 간담회에서는 「지방소멸 현황과 정책개선방안」(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지방소멸과 지역 일자리 관련 정책과제」(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에 대한 발제에 이어 학계·산업계·지방자치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 차관은 “수도권 인구집중, 고령화 등에 따라 소멸위험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51.8%에 달하는 등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지역대학·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관심 지역을 중심으로 핵심 생활 기반시설(인프라) 개선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생활인구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 취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이동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 내 규제 특례 확대, 농림축산어업 스마트화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등 장소 기반정책과 인력양성 등 사람기반정책 간 유기적 연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주)오토닉스 대표는 지방특화 산업에 대한 공장 자동화 지원, 지역 도심과의 접근성이 확보된 산업단지 구축 등을 제안했다.

오늘 논의한 내용은 향후 지방소멸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 (별첨)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담당 부서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심규진 (044-215-4910)
		담당자	사무관	김수현 (minejk34@korea.kr)
		담당자	사무관	안영신 (justice6589@korea.kr)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김병환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은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고령화 등에 따라
 소멸위험지역¹⁾이 ‘22년 118개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51.8%에 달하고,
 앞으로도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는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지역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첫째,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지역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1) 20~39세 가임기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인 기초 지자체(한국고용정보원)

이를 위해 정부는 '24년 3천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해 지역투자의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에 대한 재정권한을 지자체로 부여²⁾하고 30개 지방대를 글로벌 대학³⁾으로 선정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 인구 유출에 따라 주거·복지·문화시설·인프라 등 지역의 생활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⁴⁾과 관심지역⁵⁾을 중심으로 핵심 생활인프라 개선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⁶⁾도 추진 중입니다.

셋째, 공간적 측면에서 유연한 인구와 생활권 개념을 적용해 지역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재정지원⁷⁾ 등을 통해 정주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⁸⁾를 늘려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전문가들께 창의적 정책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 2)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운영('23~)
 - 3) 지역교육혁신을 위해 '23~'26년간 지방대 30개교를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하여 1개교당 1,000억원을 지원
 - 4) 출생률, 고령인구, 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지역 지정(「인구감소지역법」, '23년 89개)
 - 5) 인구감소지역에 준하여 지방소멸 위기가 높은 기초지자체(행안부 자체고시, '23년 18개)
 - 6) 강원 인제군, 충북 괴산군, 충남 예산군,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 경남 거창군 ('23년 6월 지정)
 - 7) 빈집·폐교 등을 공유오피스,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 ('24년안 135억원, 9개소)
 - 8)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체류하며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까지 포함